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March 2013 **Vol. 44** 3

이달의 issue

KRILA 논단
신정부에 바란다 :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Interview
이홍기 거창군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신정부에 바란다

4 ● 권두언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6 ● KRILA 논단
신정부에 바란다 :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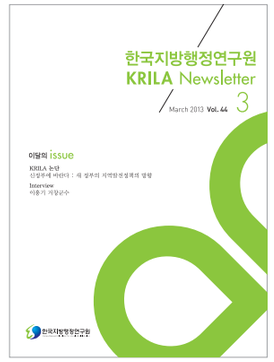
10 ● Interview
이홍기 거창군수

18 ● 자치단체탐험
삶의 풍류가 깃든 문화의 고장 거창군

● 해외우수사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20

● 도시통계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특징 24

● 연구원 동정 26



3 March 2013 **Vol. 4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44호
발행인 / 이 승 종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이 승 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난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100%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의 5대 국정목표를 포함해서 21개 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못지않게 지역발전정책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정책은 국민행복에 중요한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의 가치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령화, 저성장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이들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모든 지역이 잘 사는 국민통합도 달성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행복증진과 국민통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압축성장이 가져온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종래와 같이 '공간'의 총량적 성장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의 대상을 '지역'에서 '주민'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소의 발전' 보다는 '사람의 행복'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특히 중요하다. 갤럽의 크리프턴(Clifton) 회장이 향후 30년을 일러, "일자리 전쟁"(jobs war)의 시대가 되고, 세계를 이끄는 힘은 과거와 같은 민주, 자유와 같은 이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될 것이라 예견하듯이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가 될 것이다. 지역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동시에 복지와 연계된 '복합전략'의 추진도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주민의 체감적인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치유하고 따뜻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달성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이 부족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낙후지역 등에 대한 맞춤식 정책의 처방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풍미하고 있는 지역재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1970년대 초 지역사회개발 차원에서 시행한 새마을 운동의 승화발전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가미된 '창조적' 지역재생 전략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제 민주화에 입각한 지역발전정책 추진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민생경제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점에서 정부의 효율적 지원과 함께, 시장 전체를 협동조합으로 바꾼 정선 5일장과 같은 지역의 파격적인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정책체계도 국민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과거 지역발전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중앙부처의 정책 주도와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부처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 및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지원이 바탕이 된 '분권적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가 달성한 소득 2만불 이상, 인구 5천만의 '2-5클럽 국가' 가입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는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역발전정책이 한 단계 높은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혜를 결집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신정부에 바란다
: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김 선 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월 25일 국민행복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정부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자못 크기 마련이다. 하지만 집권당의 선거공약에 일부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발전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구상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현재의 지역발전체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법에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계획, 사업, 예산, 조직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도기반인 균특법은 참여정부에서 제정한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향하는 정책의 이념과 가치가 이전의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종래의 국가균형발전체계를 지역발전체계로 전환하여 대폭 수정을 가했으나 세부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체계의 기본구조는 5개년발전계획(계획) – 지역발전사업(사업) – 대통령직속 위원회(추진체계) – 특별회계(예산)로 이루어진 국가균형발전체계의 외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정책이 공식화된 참여정부 시기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분산, 분업, 분권 등 이른바 삼분(三分)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별법과 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균형발전정책을 제도화하고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 · 기업도시 건설 등 공간정책에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처음으로 지방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리적 분산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국민적 합세가 부족한 채, 무리한 이전시책을 강행하여 갈등을 야기시키고 시장기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부동산과 주택정책에서 시행착오를 초래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산술적 균형화를 비판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에 토대를 둔 광역경제권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광역경제권정책은 세계적 광역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소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전략이지만 "창대한 시작" 에 비해 중간 시점에서 보는 성과평가는 그리 후하지 못한 편이다. 제도와 정책은 도입하였지만 광역권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권역의 영역적 정체성, 상향적 정치과정, 광역화와 분권화의 동반, 신제도적 토양,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여건 조성에 실패함으로써 신지역주의의 이론적 측면이나 선진국의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뒤늦게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에 노력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크게 표방되어진 것이 없다. 본래 분권이나 균형발전 같은 화두는 진보정권이 선호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보수정권인 새 정부의 관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 저성장 시대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복지수요의 충족으로 사회통합을 실현시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외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주민행복의 극대화" 에 두어야 한다. 총체적으로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을 "지역개발" 에서 "주민행복" 또는 "삶의 만족도 향상" 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발전투자가 모든 지역에 걸쳐서 최종수혜자인 주민의 행복 또는 삶의 질과 직결되도록 정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지역발전의 대상을 공간인 "지역" 에서 구성원인 "주민" 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지역의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는 것보다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사업도 "장소의 번영" (place's prosperity)

보다는 “사람의 번영” (people’s prosperity)을 겨냥하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과정인 “개발” 에서 결과인 “행복 또는 삶의 질” 에 맞추어 최종 수혜자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도록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를 배분해야 한다. 요컨대 산업, 기술, 인프라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 과제보다는 소득, 일자리, 복지 등과 같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단기적, 현실적, 미시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지역발전정책이 기여할 수 있어야 정책의 대국민 수용성이 커지고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

둘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조적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계속사업 중심으로 전년 답습의 관행적, 획일적 예산 신청 및 배분으로 인하여 지역발전투자의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지역발전수요에 기반한 예산 투자와 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물리적 시설사업의 확대보다는 창조적인 소프트 사업을 통한 차별화로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고하는 블루오션 전략이 매우 절실하다 지역별 상이한 여건을 도외시한 채 유사한 전략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창조성과 다양성을 살린 소프트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고 지격(地格)을 향상시키며 소득과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셋째,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격차, 계층간 격차, 세대간 격차 등 다차원적인 양극화현상을 극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상생발전을 지향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시대를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새 정부의 통치이념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균특법이 지향하는 목표와도 일치한다. 빈곤 또는 취약계층, 저발전지역, 고령인구 등에 정책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분야, 낙후지역 재생,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의 지역발전 추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오랜 국가주도적 지역발전시스템의 고착화로 인해 지방에서는 지역발전을 내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의 축적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부족한 지역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서 고령화로 인한 인적 추진역량의 악화,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 추진체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즉 “조직화된 주민” 으로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집단적 선도(collective initiative)와 참여를 통해 부족한 인적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투자의 광역화를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등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는 단일기관, 단일지역, 단일사업 중심의 획일적 사업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연관된 둘 이상의 기관, 지역, 사업이 복합화되는 연계협력적 추진방식을 확대 · 적용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사업의 자율분권형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광특회계 운용과정이 상당히 간소화되었으나 큰 틀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주도의 예산과정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부처의 개입과 간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제에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광특회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운용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광역경제권정책의 핵심인 지역산업정책을 개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전략적 산업을 제외한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은 자치단체에 맡김으로써 지방의 추진역량을 축적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산업 추진체계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남부내륙의 중심,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거창



이 홍 기
거창군수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정목표로 내세우신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은 거창군민의 모든 꿈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창은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사과, 포도, 딸기 등 명품 과실을 재배하는 데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지역이지요. 거창군의 미래비전은 이러한 우리의 내재적 자원인 교육, 경관, 건강, 환경 등 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민과 함께 창조적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동서남북 관광산업개발, 찾아오고 체험하는 문화 확산, 농업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적 신산업 발굴과 도시마케팅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거창을 판매하여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브랜드 도시, 인구증가로 젊고 활기찬 정주도시, 지속성장 가능한 '매력 있는 창조 도시 거창' 의 미래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거창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쪽인 가조온천권은 건강 온천과 산악 관광타운으로, 서쪽인 수승대권은 역사가 살아 있는 명승지화, 남쪽인 옛이야기권역은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 북쪽인 백두대간권은 숲 체험을 통한 치유의 장과, 거창읍 중심부에는 아카데미파크, 창조거리, 생태공원 등 새로운 콘텐츠로 창조도시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거창승강기밸리를 조성하며 산 · 학 · 연 · 관이 공동으로 인적 · 물적 자원을 거창에 집적화함으로써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한국형 표준모델 '거창승강기'를 개발 · 생산하여 국내외 승강기산업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승강기대학 개교, 지난해 4월 22개 승강기 선도업체의 입주, 연구와 실험을 위한 R&D센터도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착공하여 올해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조타운 유치, 사람이 사람을 돕는 아림1004운동 추진, 농 · 특산물 세일즈단 운영과 농업회의소 설립, 농업비전 선포, 돌아오는 농촌 귀농천국 조성, 군민의 날과 연계한 5대 축제 통합개최와 체육회 통합, 국제연극제를 비롯한 4계절 축제 개최 등 취임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88고속도로가 확장되고 함양~울산 고속도로 개통되면 인근 주변도시에서 1시간대에 1,500만 명의 인구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거창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거창에 오고 싶게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거창일반산업단지와 승강기밸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창조거리와 법조타운, 아카데미파크 조성, 합천댐 상류에 99만 평방미터의 경관테마랜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기초질서 나부터', '친절은 거창하게', '아림1004 다함께' 등 3대 의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형 농촌의 품격 있는 창조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거창군 특성에 맞게 친환경 고품질 농 · 특산물을 생산하고 새로운 종합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귀농천국 거창 방문의 해로 귀농지원과 귀농투어 활성화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국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신임 도지사 취임에 따라 국정 및 도정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해를 맞아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시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올해는 민선 5기에 이루고자 했던 주력 과제들에 대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가속도를 붙이면서, 우리 거창의 지속발전 동력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형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가는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21세기 환경 · 생명의 시대를 맞아 환경을 빼고서는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미래가치를 찾기 위해 지난 해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하였습니다. 환경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돌아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군도 자연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프라이부르크에 버금가는 환경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거창군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신념으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정, 산업체, 공공기관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분석과 절약방안을 강구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도시 마스트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세부계획으로는 민간사업자가 1개 마을에 만들어 시험운행 중인 소수력 발전소를 확대 보급해 나가고, 송정택지조성사업에 패시브하우스를 건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을 보급하여 에너지 제로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녹화사업으로 녹색공간 조성을 확대하여 탄소량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문화 확대 등 에너지 실천운동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함은 물론 거창군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푸드종합센터 운영을 통한 Two-Track 유통 · 마케팅 고도화입니다. Two-Track 전략으로 농업 · 농촌문제 해결은 물론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 축으로 선도농가는 규모화, 현대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경영을 보장하며, 다른 한 축은 80%를 차지하는 중소농, 고령농의 안정 우선 정책으로서 소량 · 다품목의 농 · 특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하는 경영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과, 딸기, 포도 등 주요 원예작물의 규모화 · 규격화 · 브랜드화로 물량조정력을 높여 나가고, 거점APC와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수직계열화로 도매시장에서의 가격협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창푸드종합센터는 중소농과 고령농 중심으로 생산되는 소량 · 다품목 농산물을 취급하게 될 것이며 전담부서를 만들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가 준공되면 이동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순회 수집하게 될 것이며, 유통 · 마케팅 고도화로 인해 농민은 안심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만 주력하고, 판매는 센터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거창사과, 딸기 특구지정 브랜드화를 추진합니다. 경남 1위, 전국 5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거창사과는 1,509ha에 34,058톤을 생산하여 883억 원의 수입을 올린, 거창군의 대표농산물이며, 딸기는 158ha에 6,400톤을 생산하여 243억 원의 수입을 올린 소득 작물입니다. 거창의 대표농산물인 사과와 딸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특구를 지정, 향후 5년간 798억원을 투입하여 재배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과 · 딸기 품질경쟁력 향상 산업기반 조성, 특화상품 가공 · 유통시스템 구축, 산 · 학 · 연 · 관 클러스터 구축, 기존의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 관광산업 등 전반에 걸친 사업을 추진해 브랜드를 통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창의 사과와 딸기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생산의 메카로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전국에서 유학 오는 명품교육도시로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교육지원 방향이 입시위주와 명문대 입학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교육의 다변화에 따른 교육지원 트렌드도 바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밀집지역 일원(10개교)을 아카데미파크로 지정하며, 도시와 함께 하는 캠퍼스타운 그리고 특화되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교육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현재 추진



스텐포드대학생 초청 여름영어학교 수료식

중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생 초청 영어 캠프를 지속 추진하여 세계 유명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를 통해 꿈을 키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아시아시대의 주역인 한중 청소년이 참여하는 한중 사이버 문화교류 및 공동협력수업으로 양국 청소년의 지식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중국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어학캠프와 예절캠프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문학도시 조성사업으로 저명한 시인, 소설가를 초청하여 인문학 강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인문고전 독서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고전백일장을 유치하여 거창을 인문고전의 메카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1년부터 유치원을 포함한 37개 전체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지난해 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자재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거창군장학회를 통한 장학금과 고교 심화수업반 운영,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 등 교육도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람이 사람을 돕는 아름1004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창군 예산 4천억원 중 9백억원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거창군에서는 1계좌 1,004원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아름1004」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범 군민운동으로 민관협력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람이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거창」 을 만들어 작은 정성으로 나눔의 보람을 느끼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주민과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 속에 4,000여명이 동참하여 4억여 원의 후원금이 접수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초 지원대상자 1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후원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홈페이지를 통해 거창군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사항 등의 조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기간,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사회에서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 나간다면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부문화 풍토도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창군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재원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시행한 ‘2012년도 녹색성장 생생도시’ 평가에서 거창군이 종합부문 군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는데,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과 내[川]와 들을 연결하는 청정 환경을 보유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강점으로 매력있는 녹색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에너지, 교통, 물 순환, 자원 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녹색생활 등 모든 부문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이 자연으로 순환되는 녹색 재생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에너지 보급률 3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도시’ 로 거듭나기 위해 2013년을 원년으로 선언하고, 신재생 에너지 지원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사업으로 23억원을 확보하여 아카데미파크를 빗물 재활용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 · 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로 및 가로 경관개선을 위한 아카데미파크 웨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교통실현과 교통체계선진화 방안으로 대동로타리 조성 사업에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근대거리 재생을 위한 창조거리도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생생도시 평가 전국 1위 국무총리상 수상

둘째, 산내들의 생태가 연결된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백두대간과 황강 상류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축 회복을 위해 경관테마랜드 조성, 생태공원, 습지원, 탐방로 등을 확대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덕유산, 금원산, 월성계곡, 수승대 등 천혜자원을 보호하고, 도심지 자투리 공원 48개소를 조성하여 녹색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마을경관 개선에도 집중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녹색생활과 산업으로 행복한 녹색 웰빙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덕유산, 가야산 국립공원을 활용한 건강 Outdoor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폐도를 재활용해 사계절 봅슬레이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캠핑장 등 레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 100리길, 건강둘레길, 감악산 물맞이길, 월성계곡 트레킹길, 공공자전거 “그린씽” 운영 등 다양한 건강 테마길을 조성해가겠습니다. 또한

덕유산 치유의 숲을 활용한 대체의학센터 건립 추진과 허브 · 한방을 접목한 가조건강온천을 조성하여 자연자원을 이용한 의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넷째, 숲과 도시가 하나 된 녹색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신 ·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passive(자연형) 산업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와 환경기초시설 일원에 낙동강유역 환경청 특별지원 우수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에코에너지파크를 조성하여 쓰레기 소각장 폐열을 활용하여 온수와 전기 생산, 빗물재활용 시설과 태양광 · 태양열 · 소수력 발전시설과 친환경 에코학습장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거창의 농업을 토양환경 개선, 천적 · 유용미생물 공급, 친환경 농법 지원 등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현재 4%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청정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한 지역 현안 과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달 25일 제18대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를 내세운 만큼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140개 국정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약속을 잘 지키는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거창군은 남부내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때 서북부 경남의 교통, 행정, 교육, 금융의 요충지였지만, 도로 등 SOC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매력 있는 창조거창” 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편리한 도로망의 구축으로 생활의 편익과 균형적 발전,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지역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로 현안과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을 경유하는 88고속도로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1984년 2차로로 개설되었던 88고속도로는 국내유일의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국도이며 급경사와 급커브가 있어 2015년 완공목표로 4차로 확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148.5K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광역철도망인 대구-광주(191.6km)철도개설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 착공이 절실합니다.

거창은 농업 군으로서 인구의 35%가 농업인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며, 인건비, 비료, 기름값 등 생산비는 계속 증가되고 현재 발효 중인 한 · EU, 한 · 미 FTA는 물론, 앞으로 추진될 한 · 중 FTA는 우리 농어촌에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파동, 유통기업과 중간 상인만 배불리는 원시적 유통구조를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파산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재해 피해 지원확대, 축산분야 시장개방 대책과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승강기 설치 대수 약36만대로 세계 9위, 연간 신규설치 대수 약 2만 5천대로 세계 3위의 메이저 시장의 위치에 있는 승강기 강국입니다. 거창군에서는 높은 성장세와 가능성을 가진 산업인 승강기산업의 부흥과 낙후된 경남 서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승강기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는 2008년 6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착수한 지 5년이 도래되었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에서는 제2회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거창승강기산업단지에는 22개업체가 유치되어 10여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승강기 R&D센터건립도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등 거창승강기밸리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거창군이 승강기산업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이만큼 구축시킨 상태이므로 이제는 중앙정부가 「승강기산업진흥법」 을 제정해서 거창승강기밸리가 승강기산업특화단지로 지정, 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담 · 정리 : 김 도 형(한국지방행정연구 연구원)

삶의 풍류가 깃든 문화의 고장 거창군

문화유산 따라 걷기 _ 수승대 트레킹 길


만월당


능산리 석조여래입상


수승대 전경

거창군 위천면에는 수승대를 베이스캠프 삼아, 위천 · 북상면 일원의 주변문화유적지를 도보로 둘러보는 여정의 문화유산 여행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관광객에게 옛 선비들의 멋과 흥을 찾아 거창의 문화유산 여행길을 떠나보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문화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참신한 경험을 선물한다. 거창 문화유산 여행길 코스는 2가지가 있다.

– 1코스 –

[수승대 ▶ 정온 선생 종택 ▶ 모리재 ▶ 강선대 ▶ 농산리 고인돌 ▶ 만월당 ▶ 갈계숲 ▶ 행기숲 ▶ 농산리 ▶ 석조여래입상 ▶ 용암정 ▶ 수승대 코스]

: 수승대 주변의 모든 문화유산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14km구간으로, 약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해설을 겸할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되며, 등산화 착용이 필요하다). 1코스는 최적의 코스로, 동계정온 선생이 생전에 강동에서 모리재로 걸어 다닌 길로 예상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코스이다.(체력이 약할 경우 다소 힘든 코스이며, 트래킹으로는 적당하다).

– 2코스 –

[수승대 ▶ 정온 선생 종택 ▶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 강선대 ▶ 농산리 고인돌 ▶ 만월당 ▶ 갈계숲 ▶ 행기숲 ▶ 용암정 ▶ 수승대 코스]

: 수승대 주변의 모든 문화유산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9.9km코스로, 약 2시간 40분 소요된다. (해설을 겸할 경우 추가시간이 소요되며, 등산화 착용이 필요하다). 2코스는 1코스와 달리 모리재를 가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코스이다. 특히 수승대에서 용암정까지 강을 따라 이어진 1㎞ 구간의 숲길은, 더운 날씨에 걷더라도 무리가 없다.

휴식과 명상의 최적 공간 _ 수승대


황산리 신씨고가


황산마을 옛담장

거창의 대표 명승지 수승대는 덕유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높이 10m의 커다란 바위이다. 덕유산에서 흘러내린 성천, 산수천, 분계천과 송계의 갈천이 위천으로 흘러들어 큰 못을 이루면서 생겨났다. 드라마 속 배경으로도 멋진 수승대는 옛 백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송별식을 치르던 곳으로, 속세의 근심 걱정을 잊을 만큼 승경이 빼어난 곳이란 뜻을 지녔고, 퇴계 이황의 개명시와 갈천 임훈의 화답시로도 유명하다. 수승대 말고도 거창 지역의 빼어난 역사유적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주변관광지로는 구연서원과 요수정이 있다. 구연서원은 조선 중종 때 요수 신권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쳤던 장소로, 처음에는 구연재였던 것을 후학들이 신권 사후에 서원으로 세운 것이다. 서원의 정문 관수루는 문인화가 관아재 조영석이 안의현감으로 있던 18세기에 세웠다.

영조대왕이 숙종의 어진을 그리라고 명했지만, 하찮은 기예로 임금을 섬기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며 거부했던 화가로, 공재 윤두서에 비견할 만한 대가였다고 전한다. 2층으로 된 누각은 회전하듯 굽어 자란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하여 독특한 멋이 있다. 요수정은 '수승대를 보기에 좋은 정자' 라는 뜻으로, 신권의 호를 따라 지었고 선비들의 크고 작은 글씨가 남아 있다.

소담한 옛 집들 _ 황산 전통고가마을


황산리 신씨고가


황산마을 옛담장

수승대 건너편으로 500m정도 걸으면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와 정자가 맞이한다. 돌담에 둘러싸인 고택들이 형성한 거창 신씨 집성촌으로 이루어진 황산 전통고가마을은 조선시대의 전통 한옥의 온돌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개울을 따라 가지런하게 늘어선 마을에 들어서서 돌담 사이로 난 골목길을 걷다 보면 수백 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설렘과 함께, 소담한 옛 집들의 향토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함이 공존한다. 인근에 벽화마을과 수승대가 있어서 연계관광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Ⅰ. 중간지역조직의 개념

- 최근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시민과 정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중간 지원 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 외에 인큐베이팅을 선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 강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지속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토대로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생적 발전이 중요시되고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주로 NPO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NPO와 NPO, NPO와 행정기관, 기업, 주민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함
  - 중간지원조직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매개집단(Intermediary) 또는 인프라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IO)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됨

Ⅱ. 중간지역조직의 역할 및 내용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감안한 상담 · 조언, 지역공동체에 부족한 인력 등의 육성 및 확보 지원, 사업 계획의 개최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 특히, 중간지원조직은 지원 사업을 자금 또는 인력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자체 사업의 실시 및 공공 기관 등의 외부 자금 지원을 확보, 외부 인재의 활용 등을 실시
  - 지원 사업으로의 재원은 위탁 사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협력 사업 등에서 파생된 소득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특히 자신의 사업 도구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이를 활용한 사업으로 사업 소득 기반을 형성함

- 일본 지역공동체의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은 정보의 교류부터 상담, 교육, 홍보, 창업지도, 융자, 설비지원, 그리고 조사 및 연구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표 1 〉 일본 지역공동체사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구 분	내 용
정보 교류	– 고객과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의미 제공
	– 행정 및 기업에 대한 개별 대응을 통한 정보의 수신 및 발신 (홈페이지, 웹, 메일링, DM, 팜플릿 활용)
모임의 장(場)제공	– 대면 방식에 의한 모임 기회 마련
	– 홈페이지를 이용한 오프라인상 공간 확보 및 제공
상담	–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오프라인, 전화, 메일을 이용한 상담
세미나 개최	– 지역공동체사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지역공동체사업과 지원자 간의 의견교환
	–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목적의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전문적 지원	– 전문적 상담에 대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상담 실시
	– 사업전략, 마케팅, 회계, 세무, 법무 등의 조직운영에 대한 상담
강좌 및 연구회 개최	–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소수를 대상으로 한 강좌 및 연구회 개최
교류 및 연결 서비스	– 지역공동체 사업 주체와 사업주체, 지원자간 연계 실시
시설 및 설비 지원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무상 또는 저렴한 알선 및 지원
창업 지도	– 정보와 사람이 모인 지원네트워크 형성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자치단체가 조성한 중간지원기관에 위탁하는 형태의 인큐베이션 기능 제공
융자 및 펀드	– 지역공동체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용자금 알선
조사 및 연구	– 지역공동체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정책제언
	– 지역대학과 연계 및 공동추진

*자료 : 김선기(2011),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방안 참조 재작성

-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지원 내용은 지역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보건복지관련 사업으로 구성됨
  - 주요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중시하는 '지역중심형' 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지향형' 으로 구분됨

● 또한 추진 사업은 지원 사업과 자체 사업 성격에 의해서 분류되어 지원되고 있음
  – 지원 사업으로는 컨설팅 및 인재 매칭, 강좌 개최 등으로 구성
  – 자체 사업으로는 시설 관리 및 각종 조사, 인큐베이션 시설의 제공, 지역 포털 사이트 운영, 온라인 기부 사이트 운영, 복지 평가 사업 등으로 구성
  – 사업의 결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사업자에 대한 지원, 창업 촉진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

〈 표 2 〉 일본 지역공동체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구 분	내 용
주요 지원사업	– ‘지역 활성화 · 마을 만들기’ 가 약 70%, ‘보건 · 의료 · 복지’ 가 약 60%로 대다수 사업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함
지원사업 종류	– 중간지원기관의 기본 기능으로 전체의 약 90%가 ‘상담’ 사업을 실시
	– ‘코디네이터’ 와 ‘창업 지원’ 은 전체의 약 70~80% 단체가 실시 중
	– ‘시설 및 비품 제공’ 과 관련된 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는 달리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
담당별 지원사업 실시	– 개개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근 담당 직원이 주로 담당(50~70%)
	– 교육사업과 관련된 ‘인재 육성 지원’ , ‘교류 촉진’ , ‘연구제언’ 등 지식 · 코디가 필요한 사업은 이사 등 임원 중심으로 구분하여 실시
지원의 중요도	– 사업의 추진을 위한 상담으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음
	–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성 측면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지원의 지속성	– 개별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은 창업을 목적으로 지원을 실시함
	– 연간 지역공동체사업의 지원 단체수는 11~50개임
	– 평균적인 지원 기간은 3년 정도인 중기 지원이 대부분임
네트워크	– 지역공동체사업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네트워크 대상은 주로 ‘행정’ 으로 행정 역할의 중요도가 높음
	– 지역에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지역 네트워크가 중요 요인으로 구성됨
지원기관의 이익	–사업으로 인한 지원기관의 이익은 대부분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기관의 규모	– 지원기관의 규모는 1,000만엔 이상의 규모에서는 시설 및 설비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000만엔 이상의 규모에서는 자체사업 수행의 비율이 높음

*자료 : 関東経済産業局(2009),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間支援機関のビジネスモデルに関する調査,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間支援機関に関する活動実態及び 運営課題の抽出 참조 재작성

Ⅲ. 일본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시사점

●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또는 ‘인력’ 을 확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네트워크’ 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즉, 지역공동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확충 문제는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고는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인 인지도가 낮은 지역공동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상공업 단체와의 연대 강화, 네트워크 범위 확대 (기업, 지역 대학 등)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지속적인 중간지원조직 형성을 위한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방안
  – 지원사업 이외의 자체수입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에 중간지원기관은 기업체와 관련 부처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며, 지역공동체사업에 중간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을 발생시킴
  – 자체적인 지원사업 외에 제3자로부터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에 중간지원기관은 부처 및 기업체의 위탁을 받아 지역공동체사업에 중간지원과 인재육성 및 매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체는 중간지원기관에 예산을 지원함
  – 지역공동체사업 사업자간 네트워킹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수입을 확보함
  – 또한, 중간지원기관은 수익성이 낮은 지원 사업에 한정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사업이 독자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유지의 주요 항목으로는 사업 자체의 강화, 조직 체제 및 네트워크의 충실, 지원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있음
  – 즉, 지원사업 등에 의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인큐베이션의 수탁 및 지역 인재매칭 사업의 수탁 등을 통한 수익 등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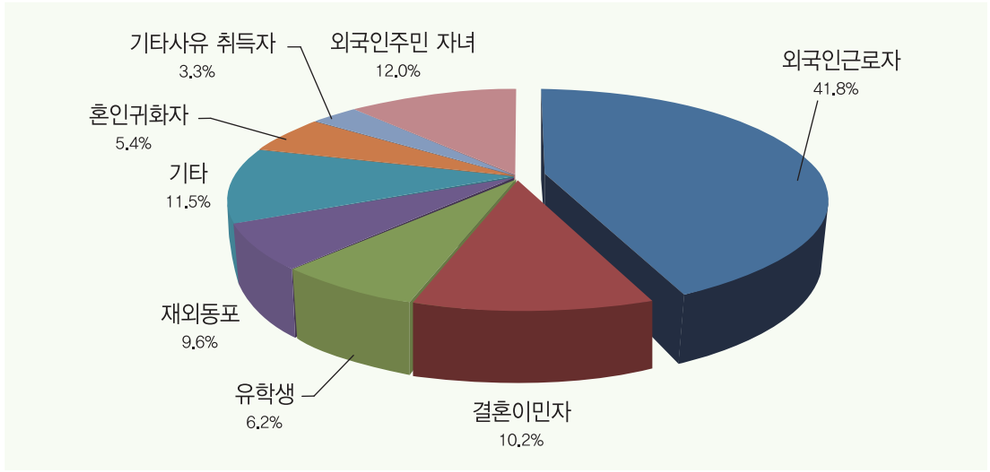
박 승 규(지역발전연구실 수석연구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과 특징

1. 다문화사회 구성현황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2012년 1월 기준 약 140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약 126만명보다 11% 증가하였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약 58만명(41.8%), 결혼이민자는 약 14만명(10.2%), 외국인자녀 약 16만명(12.0%) 등이 주 구성원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유학생이 약 8만명(6.2%),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약 13만명(9.6%), 혼인귀화자 약 7만명(5.4%), 기업투자자 등 기타외국인 약 16만명(11.5%) 등이 있다. 이중 한국국적 취득자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8.7%인 약 12만명으로 '11년도에 비해 15.2% 증가하였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 구성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201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참조

한편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69.4%,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여성이 8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다문화사회의 특징

외국인주민의 빠른 증가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은 '90년 약 5만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6월 기준 126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08 ~ '11년 기간 중 연평균 14% 증가하였으며 OECD평균인 5.9%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의 64.5%인 약 8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 표 1 〉 주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수(2012.1)

구 분	자치단체 및 외국인주민수(명)			
시도	경기도	서울시	경남도	인천시
	380,606	366,279	74,517	69,350
시군구	안산시	영등포구	구로구	수원시
	50,864	50,531	37,359	35,65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참조

외국인근로자의 집단거주 형성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근로자가 급증하였다. 즉, 2004년에는 7천여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1월에는 약 58만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비가 적게 드는 지역인 안산시 원곡동과 영등포구 대림2동 등에 집단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기능 인력중심의 외국인 유입과 집단거주는 인종과 종교, 경제적 계층화로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중국(54.8%), 동남아시아(26.7%), 남부아시아(7.1%), 중앙아시아(3.5%) 순이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보편화

지난 '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등으로 증가된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자는 혼인귀화자 약 7만 7천여명을 포함하여 약 22만명에 달하고 있다.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연평균 1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아직까지 30%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출산, 재혼자 국제결혼(연 12천여건), 중도입국자녀 등으로 외국인주민 자녀도 약 16만8천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별 비율을 보면, 중국(57.3%), 동남아시아(29.5%), 일본(5.1%), 미국(1.1%), 러시아(0.7%) 순이다.

다문화 인식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 잠재

다문화가족의 취약한 생활여건 등이 자녀의 교육 및 취업기회 제한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빈곤이 대물림의 우려가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학교 취학율은 69.2%로 우리나라 일반가정의 취학율 99.6%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방치되면서 사회불안으로 가시화 되어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언어 · 문화 · 종교 차이는 기존 사회질서와 생활규범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다문화주의 국민의식으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석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6대 이승종 원장 취임식

일 시 / 2013. 3. 4(월) 14: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스리랑카 동부도 고위 공무원 방연

일 시 / 2013. 3. 12(화) 15: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역시 · 도 정책연찬회 개최

일 시 / 2013. 3. 14(목) ~ 3. 15(금)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참 석 / 광역시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



KRILA 아젠다 워크숍

일 시 / 2013. 3. 19(화) 10:30 ~ 12: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실
주 제 / 재난 방재 안전 분야 R&D 사업 추진전략
강 연 / 국립방재연구원 심재현 방재연구실장

정기간행물 발간

- KRILA FOCUS (2월호)
  – 국가브랜드로서의 새마을운동 정책 방향 (임경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